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김 기 덕

(순천향대학교)

[요 약]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의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주제어 : 인정패러다임, 분배, 정의론, Honneth, Fraser, 사회복지 정체성

1. 인정관점과 사회복지의 어디에서 교차하는가?

이 글의 목적은 인정 관점(perspective of recognition)이 담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¹⁾ 부연하자면 최근 들어 사회철학 분야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정 논의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 한 것임

1) 인정(recognition)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타자에 대해 갖는 특정한 태도와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현재 비판이론과 정의론 분야에서 인간과 사회의 정당성, 사회이론, 정치적 실천 등이 결합한 하나의 실천철학적 입장과 논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개념이

의 핵심 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와 정당성을 모색하는데 있어 얼마나 유용하고 적절한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문제제기이다. 인정에 대한 탐구는 현재 사회적 질서를 기술하고 이들 속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하는 사회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전통적인 윤리학과 정치학으로 대표되는 실천철학(practical philosophy)의 영역에 속한다.

실천철학은 '사회적, 정치적 실존의 최상 형태는 본성상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하위 질문을 탐구한다(정대성 역, 2008: 15). 그 하나는 개인에게 있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최상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천 철학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질서들이 과연 인간에게 있어 최상의 것을 현실화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다.

인정 역시 단순히 현실을 기술하려는 과학적 개념 도구가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란 어떠한 모습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삶을 저해하는 사회적 부정의의 창출 구조를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총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실천철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실제로 실천철학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문성훈 역, 2011: 14). 최근 인정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정치, 사회철학을 중심으로 비판이론과 정의론의 분야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논문의 주제인 사회복지의 존재의미와 정당성을 논의하는 노력과 인정에 대한 검토가 교차하는 부분도 바로 이 영역이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집단의 정의를 통일시키고자 했던 실천철학은 윤리학과 정치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사회복지의 존재의미와 규범적 정체성 모색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범주들로 고려되어 왔다(이봉주 외, 2014; 황보람, 2012; Reamer, 1995 참조).²⁾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인정 패러다임이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 탐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정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본 연구의 논의와 같이 비판이론의 개념 범주로 인정을 소개한 논의는 황보람(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그 외는 주로 다문화실천현장이나 사회복지사의 실천 혹은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영역(김정선, 2011; 황성재, 2010)에서 인정이 가진 의미를 탐색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려는 이 글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

나 이론을 넘어 하나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Fraser는 자신의 글에서 인정은 대중적 패러다임(folk paradigm)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문성훈 역, 2014), 한국의 대표적 인정이론가인 문성훈도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Honneth와 같은 개인 학자가 보다 치밀한 논리구조와 내용으로 인정논의를 펼칠 경우에는 인정이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문성훈, 2014).

2) 황보람(2009)은 사회적 돌봄이라는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규범적 정체성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윤리정치성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데 전통적 실천철학이 윤리학과 정치학의 통일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흥미롭고 적절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철학자인 Reamer(1995) 역시 사회복지 철학체계를 구성하는 자신의 작업에서 철학의 하위 학문 중 정치철학과 윤리학을 사회복지의 존재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런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정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인정 논의의 등장배경과 의미를 검토한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인정 개념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최근 들어 인정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사회철학의 주요 내용들인 비판이론과 정의론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이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인정 논의 자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쟁점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인정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두 학자인 독일의 Axel Honneth와 미국의 Nancy Fraser의 주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 시점에서 적절한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와 정당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정 관점의 유용성과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인정이 담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Honneth와 Fraser의 논의의 비교를 통해 인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리라고 보인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독일과 미국이라는 연구자의 지역적 배경의 차이, 비판이론과 정의론이라는 실천철학적 지향의 차이, 경제와 문화에 대한 상이한 이론적, 실천적 견해의 차이 등 많은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비교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은 이 글의 최종 목적인 인정이 가진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에 대한 함의를 크게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기존 노력의 한계를 인정 논의가 어떻게 돌파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정은 어떠한 개념이며 그 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인정 개념의 위상

현재 비판이론이나 정치철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정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한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인간 존재 및 발달에 대한 설명 도구로 인정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의의식을 구현하며 성장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차지하는 인정개념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사회심리학자인 Mead나 철학자 Hegel이 사회에서 인간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현하는지를 밝히고자 수행한 논의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인간들 각자의 고유성에 대한 상호 인정이야말로 개별 인간들의 정체성 발달과 긍정적 자의의식 형성의 기본 도구이자 추진 동력이라는 것이다(송영배 역, 2001: 68-69; 문성훈 역, 2011: 144-182). 둘째, 인정은 주체가 타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타자윤리(ethics of the other) 영역에서 윤리적 입장의 한가지로 사용되고 있다.³⁾

3) 여기에서 타자란 흔히 자신과 다른 존재, 즉 차이를 가진 존재로써 동일성으로 환원하기 힘든 고유성을 가진 존재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에 대해서 여성, 백인종에 대해서 유색인종, 자국민에 대해 이주민, 부르주아지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이성애자에 대해 동성애자가 타인이다(문성훈, 2011:

이 경우 인정은 책임(responsibility), 관용(tolerance), 환대(hospitality) 등과 더불어 타자윤리 영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윤리적 입장들 가운데 하나이다.⁴⁾ 이러한 경우 인정은 자아와 타자 간의 상호인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반응의 총칭으로 이해될 수 있고 주체의 정체성과 타자의 차이성을 통합할 수 있는 적절한 윤리적 개념도구로 여겨진다(문성훈, 2011: 413).⁵⁾ 셋째, 인정 개념을 보편적 사회규범의 원리를 발생학적으로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문성훈 역, 2011: 2014). 이는 인정을 개인의 정체성 발달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거나 인간과 인간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타자윤리학으로 한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실존의 최상상태를 모색하는 비판이론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의 인정 논의는 주로 바람직한 사회상과 행복한 인간상을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상 구현을 저해하는 다양한 부정의의 창출구조를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는 등 사회전체의 규범적 토대와 원리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인정 개념을 위치시키는 것이다(김준수, 2002, 187-191). 분배와 인정의 대립으로 요약되는 Fraser와 Honneth의 논쟁(문성훈 역, 2014)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정개념의 위상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 사회규범의 원리를 정립하려는 체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인정 논의는 사실상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실천철학의 근본 고민이 인간에게 가장 최상인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비판적 검토라고 할 때 이러한 검토는 무엇보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존재 관계를 구현할 보편적 사회규범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2) 인정 논의의 실천철학적 의의

그렇다면 실천철학의 영역에서 인정에 대한 관심의 부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인정논의 등장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의 체제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천철학의 탐구에서 기존의 논의와는 구별되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의 변화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 논의의 등장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천철학에서 인정 논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 병리적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하면서도 근대주의가 지향하는 인간 해방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성찰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김원식, 2015; 문성훈, 2014). 인정 논의의 등장이 함의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이라는 함의를 실천철학의 대표적 영역인 비판이론, 정의론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92).

- 4) 책임, 관용, 환대, 인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논의는 문성훈(2011)을 참조하십시오.
- 5) 타자윤리영역의 인정 논의는 페미니즘이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Taylor, 1994). 실제로 인정 개념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계기는 성, 인종, 민족과 같은 특정 문화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욕구와 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였으며 현재 인정 개념은 이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도덕원리로 간주된다.

(1)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인정 논의의 의의

먼저 비판이론의 관점⁶⁾에서 볼 때 인정 개념의 등장은 비판이론의 내부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이론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정은 근대 계몽주의가 추구했던 인간 해방 프로젝트가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동일화와 억압으로 결과했던 역설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김원식, 2015: 49-71).

주지하다시피 근대의 근본이념은 자유와 해방이다. 이는 전근대 사회의 공적 기제들이 강요했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자기실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자율적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전근대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려 했던 모더니즘은 이러한 해방의 추구가 다시 억압으로 이어지는 근대의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해방의 추구라는 계몽의 기획이 인간억압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가장 근본적 원인은 근대의 해방 프로젝트가 원자화된 고립된 개인을 운동 주체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고립된 주체는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타자들을 대상화, 물화하면서 이들을 자기 욕망추구에 사용하려고 도구적 합리성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김유동 역, 2001). 타자의 대상화를 추구하는 고립된 주체는 자기 자신마저 대상화하는 강박과 나르시시즘의 주체로 전락하고 만다(김원식, 2015). 이러한 고립된 개별 주체가 집단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민족국가와 같은 폐쇄적, 배타적인 정치공동체의 출현을 낳았고 급기야 홀로코스트라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귀결됨으로써 이성의 역설은 그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정일준 역, 2013).

이러한 계몽의 역설에 직면하여 비판이론은 원자화된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대화하는 의사소통적 이성의 주체를 상정함으로써 고립된 개인이 저질렀던 타자의 대상화와 물화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장춘익 역, 2006a; 2006b). 고립된 주체 대신 상호작용하는 주체를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타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에 대한 인정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의 주체는 상대방을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주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충돌할 경우 이상적 담화작용이라는 보편적 원칙의 논증을 통해 이를 해결함으로써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상정되었다.⁷⁾

그러나 상호인정에 기반한 대화하는 주체들의 합리적 합의로 근대성의 역설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비판이론은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상이한 주체의 고유성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보편적 기준인 이상적 담화조건이 그 보편적 속성으로 인해 개별 주체의 고유성이 작동하는 현실적 삶의 맥락과는 유리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보편성과 개별주체의 상호인정 사이에는 서로 완전히 환원할 수 없는 존재의 간격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6) 여기서 다루는 비판이론은 주로 근대 비판이론의 논의를 주도 했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에 한정된 논의를 다룬다. 프랑크푸르트비판이론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사회비판과 대안(2012)을 참조하시오.

7) 하버바스의 담화 윤리와 의사소통이론이 가진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서는 김기덕(2006)을 참조하시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주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구체적 삶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생생한 삶의 체험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비판이론에 대한 요구가 팽배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법칙에 대한 논리적 인식과 이의 자발적인 복종으로 경험하는 이성적인 자율성의 기쁨이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과 인정을 담을 수 있으며 생생한 진정성의 체험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의 비판이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것이다.

한편 보편성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던 모더니즘의 해방 전략이 억압과 동일화로 작동하면서 개별 자아의 고유성과 구체적인 삶과는 유리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보편성의 근거 자체를 해체하고 부정하는 다양한 포스트모더니즘을 등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동일화와 보편적 이성으로 개체를 억압하고 배제시켰던 모더니즘과 정확히 동일한 논리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개인과 집단을 고립된 존재로 분리시키고 말았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일말의 동일성이나 연대의 부정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는 다른 논리로 완전히 고립된 개인을 창출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비판이론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가능한 상호인정의 근거를 모색하기보다는 배타성과 무관심으로 전략하게 된다.⁸⁾

이제 비판이론 진영에서는 동일성과 동화의 억압을 피하면서도 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관점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헤겔 이래로 주체와 타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류역사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인정 개념이 새로운 사회의 비판이론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인정 논의의 의의

인정이론의 등장은 정의론의 관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근대적 공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근대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보존이었고 이는 한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생산된 경제적 산물에 대한 적절한 분배 요구로 결과한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분배정의는 근대사회의 보편적 규범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핵심기제는 생산수단의 소유로 구분되는 계급간의 투쟁을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가장 중요한 심급으로 설정하였던 전통적 정의론의 관점들은 심하게 도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의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면 경제적 생산 및 분배관계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최종심급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서도식, 2008). 이러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의론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첫째는 정의의 대상의 다원화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통한 자기보존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추구하는 삶의 취향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의 인정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나 그 생산물인 자원을 통해 자기보존만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주체로 인간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정의론의 논의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정의의 논의 대상인 부정의의 창출 구조에 대한 문제

8) 문화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비판이론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기덕(2011)을 참조하시오.

이다. 후기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가 단순히 경제적 구조에 한정되지 않고 점점 다양화,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원식, 2009; 2015: 45). 이제 경제적 구조와 계급관계 만으로는 사회의 모든 불의의 생산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분배 정의에 주목하고 있던 전통적 정의관은 점점 다양해지는 가치의 내용과 확대되는 부정의 생산구조의 다양성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론의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규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개인이나 집단이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정의 범주에 중요한 심급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으로 고조되었다.

(3) 인간 존재의 이해와 인정 논의

결국 인정 관점의 등장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인정은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고 개념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사회가 처음에 상정했던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편적인 규칙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자율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들의 근거가 흔들리고 다원화되는 동시에 고체적 유대관계가 유동화되고 느슨해지면서 점점 인간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주목하게 되었다(이일수 역, 2005). 이제 인간은 단순히 자기보존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의 무시와 배척에 대해 모멸적인 고통을 느끼고 분노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과는 독립된 외재적인 규칙이나 법칙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내재적으로 탄생한 체험을 따라 판단하며, 자율성이 아니라 진정성을 더욱 중요한 규범적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존재이다(김원식, 2015: 36-44).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인간이 근대가 상정한 고립된 인간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정개념이 상정하는 인간은 자아의 발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인정에 의지하고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인간이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이를 통해 긍정적 자기의식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인간이며 이러한 상호인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정 관점이 상정하는 인간은 무엇이 보편적이고 올바른 것인가를 추구하는 인간이기보다는 무엇이 행복하고 좋은 삶인가를 고유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인간인 것이다.

3. Honneth와 Fraser의 이론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다른가?

1) Honneth와 Fraser의 공통된 논의의 출발점

인정을 상호 인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반응의 총칭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정 개념이 가진 실천철학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정 패러다임이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정 패러다임을 보다 정치한 인정이론으로 제시하는 견해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인정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를 펼치는 학자들은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Honneth와 미국의 Fraser이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론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기존의 분배 위주의 비판이론을 수정하는 동시에 인정이 차지하는 새로운 사회철학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흥미롭게 펼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서로의 인정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논쟁을 통해 비판이론에서 인정이 차지하는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문성훈 역, 2014). 따라서 인정 개념을 둘러싼 이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는 것은 현대 비판이론에서 인정 논의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정당성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의 적절한 파악과 대안 모색과 관련해서 어떠한 측면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수단이 된다.

Honneth와 Fraser는 모두 현대 사회는 급격히 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점점 다양화, 다원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통일된 인식을 보인다. 과거와 같이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한 계급관계라는 단일한 심급만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복합적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공감하고 있다. 대안적 비판이론을 모색하는 이들의 공통적 출발점을 비판이론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현대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삶에 고통을 야기하는 통로, 즉 사회적 부정의의 창출구조가 다양화, 다원화되면서 기존의 경제적 분배 중심의 단일 관점으로는 현실 부정의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극복 대안의 모색마저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분배 중심의 사회정의론과 계급갈등 중심의 비판이론이 새로운 관점이나 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후기 근대사회의 분화와 다양성이 가져온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그들은 공히 현대사회의 분화와 그에 근거한 갈등구조의 다양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편적 이성과 경제적 분배 중심의 비판이론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기의식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Honneth와 Fraser의 인정 이론의 차별성

Honneth와 Fraser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이러한 현실을 낳은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해결과 관련된 목표와 전략의 동일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현재 확인되는 사회적 부정의 창출구조의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매우 상이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인정 패러다임과 관련된 Honneth와 Fraser의 근본적 차이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판이론의 '수직적 심화'와 '수평적 확대'의 차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분화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비판이론과 정의론이 직면한 이론적, 실천적 난관을 돌파하는 대안으로 Honneth는 비판이론의 수직적 심화전략을 선택한 반면, Fraser는 기존 정의론의 수평적 확대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인정을 둘러싼 비판이론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두 사람의 인정 패러다임을 각자의 이론에서 인정이 차지하는 위상,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 현실 사회의 구조와 사회적 부정의 창출통로, 그리고 이러한 부정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전략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인정 패러다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1) 비판이론에서 인정 범주의 위상

우선 Honneth와 Fraser는 비판이론을 재정립하려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무엇보다 각자의 이론 구조에서 인정 범주의 위상을 상이하게 설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이론체계의 근본적 차이점을 야기하고 있다.

Honneth는 현대사회의 분화와 아울러 나타난 사회적 부정의 창출구조의 다양화를 직면하고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으로 이러한 다양한 분화의 현실 표면 아래에 놓인 보다 심층적인 지점으로 자신의 논점을 이동하여 위치시킨다(문성훈 역, 2011).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구조 아래 놓여 있는 근본적 비판의 지점으로서 인정이라는 심급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표면에서 발현하는 다양한 갈등과 부정의, 예를 들어 경제적 분배갈등, 인종이나 민족갈등, 성 정체성과 종교 갈등 등은 발현되는 양상이 어떻든지 간에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 즉 동일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차이를 사회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에 그 발생의 기원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사회적 갈등이란 이런 고유한 정체성의 무시를 통해 모멸감과 불만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고통이 표출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Honneth의 인정관점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이며 인간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의 갈등구조가 보이는 다양성에 직면하여 인정이라는 심층적인 심급을 설정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와는 달리 Fraser는 기존의 정의론의 관점을 수평적으로 확대하여 부정의 창출구조의 다원화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보인다(문성훈 역, 2014: 56-60). 그녀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갈등구조는 기존의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의 문제와 문화적 차원의 무시는 새로운 심급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Fraser의 전략은 전통적인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주목하였던 정의론의 관점이 가진 편협성을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인정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시켜 수평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다면 Fraser에게 있어서 인정은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Honneth의 인정관점이 철학적인 데 비해 Fraser의 관점은 정치적이며 실천적이고, Honneth의 관점이 인간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Fraser는 부정의를 창출하는 사회구조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이론적 전망에서 인정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위상을 고려해 볼 때 Honneth의 이론을 인정일원론에 근거한 비판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Fraser의 그것은 분배정의와 문화적 인정이 결합된 이원적 정의론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론의 구상과정에서 드러나는 두 사람의 시각차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사회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

Honneth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독립적이지만 상호의존적인 개인들이 서로를 상호인정하는 관계들의 총합으로 파악한다. 현대라는 역사적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 인정질서의 발전과 분화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인정이란 후기 근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독특하고 역사적인 문화적 투쟁의 쟁점이나 성과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갈등 구조의 기원에 해당한다. 그에게 있어 현대의 분배갈등이나 성, 인종,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은 모두 근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반면 Fraser가 생각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계이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분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요인은 물질적 자원의 보유 여부와 사회적 평판이라고 본다. 즉 Fraser에게 있어 사회는 경제적 구조와 연관된 계급질서와 문화적 가치평가로 표현되는 신분질서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문성훈 역, 2014: 66-73). 만일 경제적 구조와 연관된 비판의 지점을 분배라고 한다면 문화적 가치평가로 표현되는 신분질서와 연관된 비판의 지점을 인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정이라는 기본적 심급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한 것을 사회로 보는 Honneth와는 달리 Fraser는 서로 결합되어 있으나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개의 요소, 분배문제와 인정 문제가 통합되어 구조화된 것을 사회로 본다. 따라서 Fraser에 있어 인정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심급이라기보다는 근대사회의 분화에 따른 다양성의 확대에 따라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인정의 요소들이 갈등구조의 표면에 등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인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단일 심급이 아니라 다양한 심급 가운데 하나이며 다양성이 확대된 사회에 적절한 사회정의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하나의 요소인 것이다.

사회구조에 대한 두 사람의 기본적인 차이는 앞서 각자의 인정 패러다임에서 인정이 차지하는 위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Honneth의 사회구조론은 개별 인간과 인간들의 상호인정에서 출발하여 이의 분화와 확대를 그려지고 있는 반면, Fraser의 사회구조는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두 개의 기본적인 축인 계급질서와 신분질서의 통합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볼 때도 Honneth의 이론이 다분히 미시적이며 인간존재론인 반면 Fraser의 이론은 거시적이며 사회구조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사회상

사회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비판이론가로서 이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존재 혹은 사회의 모습의 차이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판이론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행복과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로서 참되고 좋은 삶(true and good life)의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회 분석과 실천적 대안제시의 지표가 된다(Greene, 1990).

이러한 측면에서 인정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원으로 설정한 Honneth에게 있어 바람직한 사회를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은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의 사회적 인정과 이러한 인정과정에서 형성되는 긍정적 자기의식의 경험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기쁨이다. 이는 모든 판단기준의 근거를 개별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문제로 설정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노에 사회발전의 동력과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Honneth가 지향하는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기여를 인정받고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회이며 이 같은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무시야말로 극복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회적 부정의이다(문성훈 역, 2011: 250-263). 인정을 근본적인 심급으로 삼아 인정 일원론적 이론을 구상하는 Honneth와는 달리 분배와 인정을 통합하여 정의론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Fraser는 Honneth와는 당연히 상이한 이상 사회를 그리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의 모든 결정 구조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는 사회이다(문성훈 역, 2014: 60). 즉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가 분배와 인정을 통합한 정의로운 사회의 지향점이며 이와 같은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분배와 제도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으로서의 인정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Fraser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사회를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동등하게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개인들은 동등한 참여 과정에서 이에 필요한 물질적, 제도적 지원과 지지를 사회적으로 경험하며 행복을 느끼게 된다. 당연히 Fraser에게는 동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나 요인이야말로 사회적 부정의의 원인으로서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다.

(4) 바람직한 사회의 실천 전략

두 사람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상과 행복한 인간존재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보니 각자가 제시하는 비판이론의 실천전략 역시 상이하다. Honneth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당하며 부정적 자기의식을 경험한 주체들의 도덕적 불만을 기본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이들이 펼치는 인정투쟁을 실천전략으로 상정한다(문성훈 역, 2014: 208-246). 반면에 Fraser는 참여적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긍정전략(affirmative strategy)과 변혁전략(transformative strategy)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긍정전략이란 부정의의 결과를 수정하는 시도인 반면 변혁전략이란 부정의를 생산하는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하려는 시도이다(문성훈 역, 2014:

126-15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Honneth에게 있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구체적으로 무시를 경험하는 인간들의 도덕적 분노라고 볼 수 있는 반면 Fraser에게 있어서는 참여적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의 비합리적 모순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의 실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Honneth의 인정 이론은 존재론적이며 인간적인 반면 Fraser의 이론은 여전히 보편적이며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정문제에 대한 Honneth와 Fraser의 사고는 근본적인 지점에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Honneth에게 있어 인정은 모든 사회적 관계의 근원이자 토대로서의 근본적인 문화원형으로 간주되는 반면, Fraser의 경우에 있어 인정은 현대사회 특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역사적 계기로서 전통적인 경제적 분배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심급이다.

따라서 Fraser의 입장에서 보면 Honneth의 인정 개념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심급들을 환원하여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Honneth에게 있어 Fraser가 상징하는 인정 범주는 역사의 특수한 계기, 특히 미국이라는 상황에서 등장한 독특한 문화적 갈등을 포착하기 위한 협소한 개념에 불과하다. 그가 보기에 실제 사회는 이러한 문화적 갈등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인정 투쟁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Fraser의 경우 여전히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 예를 들어 동등함 참여의 보장과 같은 규칙에 논의의 최종 지점을 설정하는 반면 Honneth는 이러한 보편성이 가진 한계와 폐해를 인식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인 인정과 무시라는 개별성과 진성성에 논의의 최종심급을 설정하는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Fraser의 입장에서 보면 Honneth의 인정투쟁론은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여겨질 것이다. Honneth의 이론은 사회발전의 동력을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이라는 내재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과 진정성의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충돌하는 개인의 진정성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확보는 힘들 것이다. 실제 비판이론에서 보편적 원칙의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충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Honneth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받으며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고자 할 때 이들 사이에서 상이하고 고유한 자기의식이 상충할 때 Fraser가 상징한 동등한 참여와 같은 외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Honneth와 Fraser의 인정투쟁론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Fraser 이론에서는 과연 구체적인 투쟁의 주체가 있는가? 참여의 평등이라는 보편적 원칙의 구현을 위해 기존의 부정의 구조에 저항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 주체는 과연 어떠한 도덕적, 정치적 변혁의 동기를 가질까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반면 Honneth에게 있어서 고유한 자기 정체성의 무시를 경험하는 주체의 직접적 경험이라는 투쟁의 도덕적 동기는 충분하나 과연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쟁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비판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Fraser가 여전히 올바른 사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쏟고 있는 반면 Honneth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다시 말해 어떤 사회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Honneth와 Fraser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 차이는 도덕철학의 근본적인 관심인 좋은 삶과 올바른 삶에 대한 차이를 인정 문제를 두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Honneth에게 있어서는 한 개인이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성공적인 자기의식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 반면, Fraser의 경우에는 동등한 참여의 평등이라는 누구나 합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인정에 대한 인식과 실천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Fraser에 있어 인간 내면의 진정성이라는 과제보다는 전통적인 자율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관심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과 관련하여 칸트의 주장과 같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확인하고 그러한 법칙에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율과 만족을 느낀다는 주장과, Herder의 주장처럼 보편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의 확인을 통한 내재적인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주장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김원식, 2015: 33-36).

4.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Honneth와 Fraser의 인정관련 논의는 사회철학이나 비판이론의 측면에서 커다란 함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정 논의가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 가진 함의를 크게 사회복지의 존재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인정논의의 존재론적 함의

인정논의가 사회복지에 대해 가진 가장 큰 함의는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가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와 정당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사회복지 이용자 혹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거나 사회적 욕구의 충족, 사회적 위험의 예방,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다소 막연하고 일면적인 존재 의의를 천명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의식적으로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개념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사라지거나 증발하기가 쉽다. 흔히 사회복지를 바람직한 사회 혹은 행복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간주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복한 사회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인간들의 주관적 행복들로 촘촘히 엮여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정논의 특히 Honneth의 관점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 구성에 있어 매우 매력적이면서 호소력 가득한 시각들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onneth는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사회를 매우 구체적으로 천명하는데 그에 의하며 바람직한 사회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인간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형성하는 긍정적 자기의식을 체험하여 느끼는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존재의의를 매우 정확하게 개념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목적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소유한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제도, 실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여 개인과 사회의 만족과 행복감을 성취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이봉주 외, 2014). Honneth가 추구하는 사회상과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표를 비교해 보면 개별 인간의 자기실현을 통한 긍정적 자기의식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을 핵심으로 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구조, 제도,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Honneth는 바람직한 사회의 판단을 사회일반이나 평균적 삶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 인간에 뒀으로써 사회복지가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핵심적 실천원칙인 개별화(individualization)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자기의식이라는 주관적 기쁨이나 자부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자부심이 단순히 고립된 개인이 느끼는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통해 형성되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행복이 주관적인 동시에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분명히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김기덕, 2015). 결국 Honneth의 인정개념은 사회복지가 추구하여야 할 존재의의와 목적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면서 도덕적인 실천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존재규정으로 Honneth의 인정논의가 가진 이러한 함의는 그의 이론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학적이면서 존재론적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행복의 지향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복을 담지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이다. 달리 말해 행복(well-being)이란 인간존재(human being)가 인식하고 체감하는 긍정적인 자기의식 상태라고 할 때 행복 개념은 올바른 삶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논의, 행복한 삶과 관련된 존재 논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Honneth가 인권, 정의, 평등과 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덕철학적 원리나 원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자인 Mead의 인간 정체성 발달이론을 수용하여 사회에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인정투쟁 과정에서 형성되는 긍정적 자기의식으로부터 바람직한 삶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것은 사회복지의 존재론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Honneth의 인정 개념 속에는 사회복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자의 존재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Honneth의 이론을 충실히 따른다면 사회복지가 실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가 제도적으로 설정한 법률적, 행정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무시나 불인정을 경험하면서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부정의의 발생구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매우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인간 존재는 소득의 부족, 권리의 제한, 욕구의 미충족 등의 일면적 척도에 의해 재현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적 인정을 얻지 못하는 존재 그리하여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통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억압과 무시를 제공하는 사회적 구조를 부정의의 창출구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 또한 사회복지가 추가하여야 할 구체적 과업이 되어야 한다.

Honneth의 인정 관점이 가진 사회복지의 존재론적 함의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이론이 클라이언트 당사자의 구체적인 체험이나 느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Honneth는 기존의 비판이론이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맥락이나 현장과는 유리된 채 추상적인 규칙이나 원칙으로 설정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원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비판이론은 이러한 구체적인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 특히 무시로 인한 고통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의 삶의 목소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존재의의나 목표를 정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보다 클라이언트 당사자의 자율 및 자기결정에 대한 도덕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인정이론의 실천적 함의

Honneth의 인정 논의는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구축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담고 있다. Honneth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심리학자인 미드의 인성발달이론을 이용하여 인정투쟁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인 임파워먼트의 구체적 이론과 내용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Honneth는 미드의 이론을 받아들여 개인의 긍정적 자기의식의 형성을 통한 정체성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의 가능체인 주어인 나(I)를 지닌 존재로서 자신에 대해 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일반적 정체성으로서의 목적어 Me와 충돌하면서 자신만의 구체적인 정체성의 현실태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만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이다(문성훈 역, 2011: 144-18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임파워먼트란 개인이 자기를 규정하는 사회의 현실태 Me에 대해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I의 변형되고 수정된 현실태인 Me'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은 이러한 논리와 도덕적 근거에 따라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결국 Honneth의 인간 정체성 구상은 임파워먼트 관점의 실천을 정당화하는 보다 정치한 논리구조를 형성하는 데 혁혁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Honneth의 이론은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사회복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나 이용자주의에 대한 중요한 도덕철학적 정당화와 실천 전략의 모색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가 자신의 인정이론을 구축하면서 개별 주체의 도덕적 불만을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나 현실적 인정투쟁에서 사회적 저항주체들의 경험적 요구를 중

요하게 여기는 점은 바로 이러한 측면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가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전략 측면에서 볼 때 Fraser의 인정 논의가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Fraser의 인정 논의가 기본적으로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Honneth의 이론체계와는 달리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Fraser는 동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분배와 인정의 조건들의 작동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긍정(affirmative)전략과 변형(transformative)전략이라는 매우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긍정전략이란 부정의를 양산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 구조의 결과물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전략인 반면 변형 전략이란 부정의 창출구조 자체를 직접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변형전략의 모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변형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긍정 전략인 비개혁주의적 개혁(nonreformist reform) 전략 또한 제시하고 있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raser는 분배와 인정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면서 다른 하나를 다른 하나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Fraser에게는 분배와 인정에 대한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이들이 통합되는 지점을 고려한 실천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이 바로 분배와 인정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교차-시정(cross-redressing)전략과 상호간에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경계-인식(boundary awareness) 전략이다. Fraser가 제기하는 다양한 정의 구현 전략은 바로 그가 분배와 인정의 통합 모델을 설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녀의 정의 논의를 따른다면 사회복지 역시 전통적인 분배위주의 실천전략을 넘어 분배와 인정의 두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혹은 상보 보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Honneth의 인정 관점이 사회복지의 존재적 측면의 도덕적 정당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반면 Fraser의 확장된 정의론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측면에 있어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인정이론의 사회복지적 쟁점

Honneth와 Fraser의 인정논의가 담고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근본적인 쟁점은 과연 한 사회의 구성원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만일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덕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은 모두 일정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이 쟁점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적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의 대상인 클라이언트 가운데에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사회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인구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실천철학을 구상할 때 이러한 인구집단에 대한 인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담을 수 있는 이론적 구조와 도덕적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Honneth와 Fraser가 구상하고 있는 인정 논의는 사회복지분야에 적절한 도덕 철학적 범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에 없다.

예를 들어 Honneth는 한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성을 인정받는 논리를 개인의 고유한 감정에 대한 사랑, 동등한 자격을 갖춘 존재로서의 존중, 자신이 사회적 기여에 대한 존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문성훈 역, 2011: 183-249). 그런데 만일 사회적으로 전혀 기여가 불가능한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논리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경 차원의 인정은 불가능할 것이며, 동일한 권리의 주체라는 차원의 인정인 존중의 경우에도 이미 존경이라는 차원의 인정이 제한적인 이상 장기적으로 형식적인 인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가능한 인정은 주로 가족이나 친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차원에 한정될 것인데 유동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친밀성 영역의 인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Fraser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Fraser는 사회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분배와 문화적 인정의 통합전략을 추구한다. 그런데 사회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전체의 모든 상호작용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⁹⁾ 앞서 언급한 것처럼 Fraser는 여러 가지 전략으로 동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전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굳이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면 문화적 인정에 대한 변혁적 전략을 사용하여 한 사회의 문화적 인정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후술하겠지만 이미 그러한 차원의 타자윤리적 태도는 인정이라는 범주를 넘어 다른 도덕적 범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도 사회적 동일화의 압력에서 완전히 탈피한 채 이루어지는 타자에 대한 순수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동일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인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 인정이란 한 사회 구성원이 가진 어떠한 고유성이라도 전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하면서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경제적 기여나 사회문화적 가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 달리 말해 사회의 일반적 인식 혹은 사회적 동일화의 압력과는 완전히 분리된, 기성의 사회적 질서를 재현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정 특히 반복되는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난 개체들의 고유한 차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 훨씬 더 인정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철학자 Margalit이 주장하는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가 그

9) 인정의 이런 측면은 일찍이 인정개념을 제기했던 Hegel의 논의에서 확인된다. 개인이 타자의 인정 없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 개별자의 복지가 그 개인의 특수한 목적인 동시에 타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구용, 2003: 254-255). Bauman은 근대 합리주의의 도구적 기능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을 언급하면서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어떠한 특성의 쓸모가 있어야만 인정받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이일수 역, 2005: 90).

리는 존중과 인정 개념이 보다 더 완전한 인정 개념에 가까울 것이다(신성림 역, 2008). Margalit은 인간 존중의 문제가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는 완전히 분리된 사회를 품위 있는 사회라고 개념화하면서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인간을 모욕하여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정논의가 가진 사회복지적 함의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과연 인정 패러다임이 역사적 조건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인지 아니면 주어진 사회의 환경에 따라 그 구현이 상당이 유동할 수 있는 역사적 개념인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인정 추구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동일한 인정논의의 구도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인정 개념의 정체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문화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인정이 단순한 관용이나 용인에 가까운 인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인정은 자신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돕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권리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나 연대는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정은 타인에 대한 도덕적 태도를 논하는 타자윤리학의 개념 가운데 단순히 타인의 존재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설한, 2013).

Bauman의 지적과 같이 사회의 유동화에 따라 개인들 간 관계를 지탱하는 공적 유대들이 녹아내리면서 타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둔감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인정 범주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유동적 사회의 사회복지실천의 규범범주는 도덕적 무관심(adiaphorization)과 범죄화(criminalizing)라는 두 양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김기덕, 2014). 유동적 근대 사회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정상화 논쟁이 담고 있던 규범적 속성이 점점 약화된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과 토대의 합의가 불가능한 유동화 사회에서 도덕적 판단의 축소와 확실한 도덕적 판단의 강화로 동시에 분화하여 등장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비정상이라는 애매한 도덕적 범주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무관심과 범죄로 구분함으로써 도덕적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가혹한 실천을 정당화한다. 최근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노숙자, 정신 장애인, 계도 거주민들의 사회적 공격성과 범죄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Abrahamson, 2003). 이와 같이 사회적 인정과 지지의 여지가 점점 약화되는 유동적 근대 사회에서 물질적 혹은 상징적 자산이 가장 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궁지로 몰리게 되고 그 결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무시되는 잉여계층을 양산하게 된다(정일준 역, 2008; Bourdieu and Wacquant, 2004).

인정관점이 가진 사회복지적 함의를 모색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세 번째 쟁점은 복합적 책임성(complex accountability)이라고 언급되는 사회복지전문직의 독특한 존재적 성격(Clark, 2000)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은 타전문직에 비해 특히 다양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상이한 정도의 책임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인정이론의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화한다면 과연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사회복지전문직이 실천대상으로 삼고 있는 특정한 인구집단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전

문직 자신인가라는 질문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이용자와 사회복지전문직은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들어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정이론의 중심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의 사회적 인정을 통한 긍정적 자기의식의 형성이라고 할 때 인정의 대상인 사회복지의 고유성은 클라이언트에게서 비롯되는 것인지 혹은 사회복지전문직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근본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전문직이 가진 복합적 책임성은 사회복지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중요한 쟁점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전문직의 고유성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주어진 상황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인구집단 및 사회문제와 다양하게 연관된 이해당사자들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의 공익 가운데 근원적으로 누구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정이론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의미지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사회일반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권력 주체와 권력관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인정은 단순히 기존의 권력관계에서 주도적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와 의미들의 집합체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에서 공히 의사결정의 정치적 속성과 권력관계 특히 국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Honneth는 인정과 관련된 일반이론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Fraser 역시 정의론의 확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정과 관련된 투쟁이나 정책을 실제로 고려할 때 인정투쟁과 관련된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비판이론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의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화 과정은 역시 불가피한 권력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김원식, 2015: 60-63)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이러한 권력투쟁의 정점에 여전히 국가의 성격과 기능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5. 사회복지 인정투쟁 :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근대성 결함의 징후들인 탈근대적 사회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근대성이 추구하고자 했던 인간 해방의 기획을 견지하려는 고민 가운데 등장한 인정 패러다임이 사회복지에 던지는 문제제기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다. 오히려 이 시대 사회복지의 존재의미와 그 정당성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울림은 크고 진지하다.

Honneth의 인정 이론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사회상, 다시 말해 사회적 인정 속에서 개별 인간이 체험하는 좋은 삶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립은 Honneth를 단순한 사회철학자나 비판이론가가 아니라

인간학적 존재론의 구도자로 여기게 만든다. 특히 사회질서의 근원을 상호 인정하는 인간관계와 그에 근거한 자기 정체성 정립으로 명확화한 것은 그간 다소 모호했던 사회복지철학의 지향점으로서의 복지와 행복에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Fraser가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역시 사회복지가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녀가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물질적, 문화적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된 육체와 한정된 수명을 가진 우리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조건이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인간성의 한계이다. 분배와 인정과 관련하여 Honneth와 Fraser가 주고받는 사고들을 검토해 보면 진정한 인정이론이란 Honneth와 Fraser의 패러다임이 '적절하게' 통합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전망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 Honneth의 철학적 방향에 Fraser의 실천적 전략이 결합된 인정 패러다임의 구축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이론 및 타자윤리학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직감은 사회복지야말로 진정한 인정 패러다임의 구현주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희망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야말로 철학과 정치,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정책, 도덕과 과학이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이며, 인간의 정서에서 사회적 변혁에 대한 기여까지 사회복지가 다루어야 할 영역은 현대 비판이론이나 인정 패러다임이 포괄하는 영역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된 인정 패러다임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현실 사회복지에도 커다란 변화의 함의를 던진다. 이제 사회복지가 절실히 요구하는 이론적 관점은 도덕철학과 정치학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심리학과 정신분석이 통합된 종합 이론일 것이다. 당연히 사회복지정책을 탐구하는 이는 자신의 정책 구상이 구체적 개별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구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추구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러한 기획의 물질적, 제도적 조건과 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모든 작업은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답게 만드는 존재이유인 고유한 도덕적 정체성의 테두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앞서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기존의 인정 패러다임을 더 심화시키고 정교화할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Honneth와 Fraser 두 사람이 토대하고 있는 서양 근대철학, 다시 말해 자유로운 근대적 주체를 사회건설의 요소이자 출발점으로 보고 그 개별 주체의 사회적 기여를 분배와 인정에 연결하는 논리로는 사회적 기능이나 기여를 할 수 없는 잉여인간에 대해 사회가 어떤 윤리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대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지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기여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인정의 가능성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받고 보듬을 수 있는 사회복지 고유의 타자윤리학이나 사회철학은 과연 합리적으로 구축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근대적 공간에 배태된 사회복지의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지만 선형적 인간의 존엄성과 아울러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연대의 유토피아를 내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나 합리적 전략이 존재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 역시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evinas의 윤리적 입장에 근거한 사회학자 Bauman의 주장은 사회복지에 상당한 도덕적 호소력을 가진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우

리가 다른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효용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쓸모없고 제 기능도 못하는 빈곤층과 나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형제를 책임지는 행위, 보살피는 행위와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행위에서 ‘합리적’인 면은 없다”고 본다(Bauman, 2000: 137).

이러한 점은 현대 철학자 Deleuze가 생각하는 역사의 진보개념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 그는 역사는 반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들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보편적이고 동일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재현될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억압하고 제거하는 역사는 진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우, 2012). 이는 인정이론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비판이론의 진화는 보편법칙과 동화라는 것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사라지는 개별 주체가 가진 환원할 수 없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역사의 발전과 진보라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의 반복 속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차이는 본질적으로 소수자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회의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회는 진보가 부재한 부도덕한 사회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영역은 바로 사회복지가 마지막까지 고수하여야 할 영역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가 구축하여야 할 인정 패러다임은 바로 소수자 인정의 패러다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정 패러다임이 사회복지에 던지는 호소의 목소리는 자명하다. 이제 생산과 분배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배의 패러다임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과연 다른 존재와 명확히 구별되는 어떠한 정체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인정받고 그 과정에서 누구와 같이 긍정적 자기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김기덕, 2006,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119-139.
- 김기덕, 2011, “문화적 역량 비판 담론에 관한 사회철학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3): 239-260.
- 김기덕, 2014, “현대사회의 특성과 사회복지의 위상: Bauman의 유동적 근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163-187.
- 김기덕, 2015, “사회적 행복론을 위한 철학적 단상”, 『2015 공주정신건강국제학술문화제 자료집』, 143-155.
- 김원식, 2009, “인정과 재분배”, 『사회와 철학』, 17: 97-128.
- 김원식, 2015, 『배제, 무시, 물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고양: 사월의 책.
- 김유동 역, 2001, 『계몽의 변증법』, Horkheimer, M., and Adorno, T., 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29: 205-246.

- 김준수, 2002, “승인과 사회윤리: 헤겔의 승인이론에 의거한 현대적 인륜성의 모색”, 권용혁, 한중완, 김석수, 김진석, 김준수, 원준호, 이유선 편, 『철학과 합리성』, 서울: 이학사, 187-232.
- 문성훈, 2011,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현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 철학』, 21: 391-418.
- 문성훈 역, 2011, 『인정투쟁』,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고양: 사월의 책.
- 문성훈, 2014, 『인정의 시대』, 고양: 사월의 책.
- 문성훈 역, 2014,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Honneth, A., and Fraser, N., 1999,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고양: 사월의 책.
- 박구용, 2003, 『우리안의 타자: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사회비판과 대안, 2012,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고양: 사월의 책.
- 서도식, 2008, “자기보존과 인정: 의사소통사회의 사회적 투쟁모델에 대한 반성”, 『철학논총』, 51(1): 184-202.
- 설한, 2013,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체성 주장: 인정으로서의 자유주의적 평등개념의 확장”, 『평화연구』, 봄호: 247-284.
- 송영배 역, 2001, 『불안한 현대사회』, Taylor, C.,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서울: 이학사.
- 신성림 역, 2008, 『품위있는 사회』, Margalit, A., 1996, The Decent Society, 파주: 동녘.
- 이봉주·유태균·김기덕, 2014, “한국 사회복지교육 무엇을 지향하고 가르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48.
- 이일수 역, 2005,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 이정우, 2012, 『진보의 새로운 조건들』, 고양: 인간사랑.
- 정대성 역, 2008, 『비판, 규범, 유토피아: 비판이론의 토대연구』, Benhabib, S., 1986, Critique, Norm, and Utopia, 서울: 울력.
- 장춘익 역, 2006a, 『의사소통행위이론 1』, Habermas, J., 1987,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고양: 나남.
- 장춘익 역, 2006b, 『의사소통행위이론 2』, Habermas, J., 1987, Theories des kommunikativen Handelns, 고양: 나남.
- 정일준 역, 2008, 『쓰레기가 되는 삶: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Bauman, Z., 2004, Wasted Lives: Modernity and Outcasts, 서울: 새물결.
- 정일준 역, 2013,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Bauman, Z.,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서울: 새물결.
- 황보람, 2009, “사회서비스 정책의 윤리정치성 진단 범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성찰적 근대성 이론과 사회공간이론의 관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1): 63-89.
- 황보람, 2012, “후기 근대 사회 사회적 돌봄 공간의 윤리정치성: 구성요소와 실천전략”,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자료집』, 1-29.
- 황성재, 2010, “인정과 신뢰로 먹고 사는 사회복지사”, 『월간 복지동향』, 43-46.
- Abrahamson, P., 2003, “Liquid modernity: A Bauman perspective on contemporary society”, *Conference of Social Work in a Future Europe*, Copenhagen.
- Bauman, Z. 2000, “Am I my brother's keeper?”,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3(1): 5-11.
- Bourdieu, P., and Wacquant, L., 2004,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London: Polity.
- Clark, C., 2000, *Social Work Ethics: Politics,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Palgrave.

- Greene, J., 1990, "Three views on the nature and role of knowledge in social science", 227-245, in *The Paradigm Dialog*, edited by Guba, E. G., Newbury Park: Sage.
- Reamer, F., 1995,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Social W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aylor, C., 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A Study on Implications of Recognition Paradigm for Social Work

Kim, Giduk
(Soonchunhya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Recognition Paradigm for domains of social work,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guments exchanged between Axel Honneth and Nancy Fraser, two eminent scholars in this field. The Recognition paradigm,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in practical philosophy developed to cope with the changing socio-political situations in the late modern society, is providing the domain of social work with a lot of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In particular, Honneth's recognition theory which considers the recognition as a basic prototype in huma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society is able to clarify the fundamental mission and territory the social work profession is to pursue. But for the meanwhile, Fraser's dual perspective of justice, which is an extended version of redistributive justice introducing the recognition component in it, can suggest diverse practical strategies to confront complex injustice-making structures effectively in the later modern society.

In spite of these abundant implications i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reas, the recognition paradigm still save several fundamental considerations for social work, such as the real meaning of the recognition in social work, the exact population from whom social work seek to get recognition, and the adequate strategy, so-called "recognition struggle" which social work is to employ to acquire the recognition.

Key words: recognition, redistribution, Honeth, Fraser, identification of social work

[논문 접수일 : 15. 11. 02, 심사일 : 15. 11. 07, 게재 확정일 : 15. 11. 12]